

보도시점

2026. 6. 24.(수) 11:00

배포

2026. 6. 24.(수) 09:00

농식품부, 20년 뒤 미래 청사진 그린다... 「농업·농촌 2045전략」 수립 착수

- 「대한민국 2045전략」 수립과 함께 연말까지 농업·농촌 분야 2045년
까지의 미래상과 정책 방향 설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3일(화) 14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2045전략수립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광복 이후 주요 농업정책 변화와 메가트랜드*가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농업·농촌 2045전략’ 수립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① 기후변화, ② 농산물 시장 개방, ③ 세계 경제, ④ 인구구조 변화, ⑤ AI·데이터, ⑥ 재생에너지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TF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미래상 제시 및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여 이를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TF는 김종구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 3개 반(거시농정·농산업혁신·농촌환경)으로 구성되며, 소관 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참여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단체·업계 등으로 이루어진 ‘미래소통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폭 넓은 시선에서 미래 담론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농업·농촌 2045전략’은 농식품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전략으로서, 향후 농식품부의 국정운영, 중장기·세부 계획 수립 등에 연계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23일 회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광복 이후 농업정책이 식량 증산(50~70년대)에서 개방대응(80~90년대), 공익기능 및 지속가능성(2020년대)으로 단계적 진화했으며, 기후변화, 인구구조, AI 등 피할 수 없는 여건에서 위협은 관리하고 기회를 제도화하는 균형점으로 농업정책이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은 근거에 기반한 미래 추세 전망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20년 뒤 농업·농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을 따라가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식품부는 23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인단체, 현장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2045전략 수립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이번 「농업·농촌 2045전략」 수립은 광복 이후 우리 농업·농촌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하며, “향후 농업정책의 비전과 실행 방향을 담은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산업전략기획단	책임자	과 장	문지영 (044-201-1561)
		담당자	사무관	이인혁 (044-201-1566)

